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동학과 천도교를 활용했는가

최광승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한국정치 전공
kyschom@empas.com

- I. 머리말
 - II. 박정희 정권과 동학·천도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 III. 5·16군사쿠데타와 동학혁명, 한일국교정상화와 3·1운동
 - IV. 유신체제와 천도교의 동귀일체
 - V. 맺음말
-

I. 머리말

박정희 정권은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선포로 인한 정권의 정당성 결여를 메우기 위해 다각도로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기술(記述)을 비롯하여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성역화사업 역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사회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¹

박정희 정권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신라의 화랑도와 삼국통일의 역사를 강조하는 한편, 신라의 수도인 경주 전역을 성역화하고 ‘통일전(統一殿)’이라는 국민 참배의 공간을 건립했다. 통일전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남한의 남북통일과 병치시켜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상징적 공간으로 ‘창조된 문화유적’이었다.² 정권 차원에서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정권에서 전유(專有)하기에 가능하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에 머물지 않고 그 역사성을 계승한 현실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정권은 그 역사성을 전유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동학과 천도교의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종교를 포섭하려는 경우 그 종교의 교세를 활용해 대중을 동원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³ 그러나 천도교는 교세가 매우 약했으므로 일반적인 종교의 포섭과는 달랐다. 박정희 정권에서 천도교를 포섭한 것은 천도교의 교세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동학이라는 역사성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동학에 뿌리를 둔 천도교를 현실 종교 세력이라기보다는

-
- 1 최광승, 「박정희 유신체제와 헤게모니 권위주의 정당성: 성역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 2 최광승, 「'창조된 문화유적' 경주 통일전: 유신을 위한 국민교육도장」, 『역사문제연구』 40(2018).
 - 3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b), 29쪽.

역사적 대상으로 취급했다. 또한 동학·천도교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정책은 특정 종교에 대한 입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른바 ‘한국적인 것’을 추구했던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민족문화정책, 성역화사업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973년 11월 11일 우금치 전투를 기념하여 공주 우금치에 건립된 동학혁명군위령탑은 박정희 정권의 동학 인식을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박정희 정권은 동학의 역사성을 전유하여 자신들이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자라고 자임했으며, 5·16군사쿠데타, 10월유신이 모두 혁명 정신의 재현임을 선포했다.

大望의 革命情神이 여기서 挫折당하고 … 알아줄 이 없었다. 그러나 님들이 가신지 八十年, 五·一六革命 이래의 新生祖國이 새삼 東學革命軍의 殉國精神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十月維新의 한뫼를 보내게 되만큼 … 이 탑을 세우노니⁴

동학농민군의 저항과 희생은 순국정신으로 규정되면서 저항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것은 국민을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만들고자 했던 유신체제의 이데올로기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스스로를 동학의 후예로, 동학의 혁명정신의 계승자로 자임했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동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천도교 관련 기념물에 대한 다양한 성역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역화는 박정희 정권이 당면한 정치적 국면 및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권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표1>에서 보듯, 5·16군사쿠데타, 한일국교정상화, 유신체제의 선포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동학농민운동은 혁명으로, 천도교 지도자인 손병희(孫秉熙)는 항일의 상징으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崔濟愚)는 민족주체성의 상징으로 호명되었다.

4 박정희·이선근, 「답문」, 《신인간》 312(1973), 79쪽.

표1-박정희 정권기 동학 및 천도교 관련 기념물

기념물	장소	건립 연도	박정희 정권과의 관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북 정읍	1963	제막식에 박정희가 직접 참석, 본인과 동학군의 관계 언급
최제우동상	대구 달성공원	1964	제막식에 박정희가 치사(김현철 전 내각수반이 대독)
의암손병희동상	서울 탑골공원	1966	1965년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인 박정희가 동상건립기금으로 50만 원 전달, 박정희가 치사(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대독)
전봉준고택	전북 정읍	1970	동학농민혁명 유적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지방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
수운최제우유허비	경북 경주	1971	박정희 題字, 문화공보부에서 천도교 후원 아래 문화재로 세움
동학혁명군위령탑	충남 공주	1973	박정희 題字, 비문에 5·16과 유신에 대해 언급, 탑문을 이선근이 작성
용담정	경북 경주	1975	경주국립공원으로 편입, 유적들의 현판 글씨를 박정희가 씀
전봉준장군유적	전북 정읍	1978	전북도에서 '전봉준유적정화사업계획' 수립, 유적지의 종합정비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동학의 역사성과 현실 종교인 천도교를 활용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에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의 대응과 연관된다. 해방 이후 급격히 교세가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천도교는 박정희 정권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자 했는데, 천도교가 가진 역사성과 교리를 통해 어떻게 박정희 정권과의 친화성을 획득했는지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바라본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성은 무엇이며, 천도교는 5·16군사쿠데타, 한일국교정상화, 유신체제라는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자 했는지 정권과 천도교의 상호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 장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동학, 천도교와의 관계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부터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전까지 박정희 정권과 동학·천도교의 관계를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유신체제가 선포된 이후 박정희 정권과 천도교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박정희 정권과 동학·천도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박정희 정권과 동학·천도교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인식에 주목했다. 김선경은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동학농민전쟁을 부각했고, 확산된 근대화론과 맞물리면서 동학농민전쟁을 근대로의 기점이자 반(反)봉건 반(反)제국주의 투쟁의 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⁵ 박명규 역시 박정희 정권이 5·16군사쿠데타를 민족을 위한 군사혁명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상징 자원으로 동학혁명을 활용했음을 보여주었다.⁶ 박명규는 박정희 정권 시기 갑오동학농민전쟁은 혁명으로 규정되었고, 상징 자원으로서 1963년 정읍 황토현에 세워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과 1973년 공주 우금치에 건립된 동학혁명군위령탑에 주목했다. 또한 박명규는 1963년 정읍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 새겨진 보국안민이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동원화 논리로 작용했고, 1973년 공주에 세워진 동학혁명군위령탑에 유신이라는 극단적인 억압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상징 조작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 5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역사학연구소 1894년 농민전쟁연구반(편),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서울: 거름, 1994), 71쪽.
 - 6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51(1997).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는 1960, 1970년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분석했다.⁷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국사교과서의 내용 역시 ‘동학난’이 ‘동학혁명’으로 바뀌었고, 국난극복과 주체적 민족사관에 투철한 국사교육을 강조한 유신체제에 맞춰 동학혁명이 ‘반봉건’, ‘반외세’의 사회변혁운동이자 민족투쟁운동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⁸

한편, 오제연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인식과 정권에 맞섰던 대학생들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오제연은 박정희의 저서에 나온 동학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정권이 쿠데타의 합리화를 위해 동학농민전쟁을 혁명으로 규정했다는 점과 이러한 정권의 인식에 이선근(李瑄根)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주목했다.⁹ 오제연은 박정희 정권이 동학농민전쟁을 화랑도에서부터 시작해 3·1운동과 4월혁명, 그리고 5·16군사쿠데타와 계보학적으로 연결해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선근이었고, 국사교과서에서 ‘동학란’이라는 용어가 ‘동학혁명’으로 변경되는 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¹⁰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동학농민전쟁은 유신체제에서 강조한 총화단결을 통한 국난극복사관에서 사용됨과 동시에 박정희 1인에 의한 권력 유지와 강화를 합리화해 주는 논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기

7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의 서술과 그 문제점」, 『2001정책연구보고서』(2001.12.).

8 위의 논문, 21~28쪽.

9 오제연,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대학생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역사문제연구』 33(2015), 185~186쪽, 193쪽.

10 위의 논문, 193쪽.

위한 목적으로 동학농민전쟁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념물과 같은 상징 자원을 동원함과 동시에 국사교과서에서의 내용 변경을 통해 동학농민전쟁을 박정희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총화단결을 강조하는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기념물에 주목했기에 동학이라는 종교와 창시자인 최제우, 동학이 천도교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날의 종교로 탈바꿈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주도한 손병희와 같은 인물들을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또한 기존 연구는 해방 이후 천도교 및 동학농민전쟁이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포섭되어 활용되어 왔는지는 분석했지만 천도교 스스로 어떻게 박정희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과 다르게 국가와 천도교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강인철은 한국에서 정치 지배세력과 종교의 관계를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종교에 대한 정치세력의 전략을 ‘헤게모니전략’으로 보았다. 반면 정치에 대한 종교의 전략을 기독교, 불교, 카톨릭과 같은 주류 종교의 전략은 ‘영향력전략’으로, 주변적 종교의 전략을 ‘합법화전략’으로 설명했다.¹¹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주변적 종교인 천도교의 전략은 영향력전략과 합법화 전략이 혼용되어 복합적인 형태로 상호작용했다.

박세준은 국가와 종교조직의 관계를 국가의 지원과 규제, 종교조직의 협력과 저항이라는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며 박정희 정권과 천도교의 관계를

11 강인철은 주류 종교가 사용하는 영향력전략을 ① 최고 통치자 접근 전략, ② 정당 전략, ③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력 전략, ④ 선거 전략, ⑤ 사회운동 전략으로 나누고, 주변적 종교가 사용하는 합법화전략을 ① 지배이데올로기 편승 전략, ② 민족화 전략, ③ 현지화(토착화) 전략, ④ 공신력 전략, ⑤ 탈정치화, 정치적 전향 전략, ⑥ 정치적 보호막 구축 전략으로 설명했다. 강인철, 앞의 책(2013b), 28~33쪽.

국가의 지원과 천도교의 협력으로 설명했다.¹² 특히 ‘교정쌍전(敎政雙全)’이라는 천도교 교리를 통해 정치와 밀접한 관계 맺기를 했던 천도교만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과 천도교의 관계를 최덕신(崔德新)이라는 천도교 교령을 통해 살펴보았고, 최덕신이 만든 천도교 내 전위조직인 새인간연맹을 통해 천도교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세준은 새인간연맹에서 발행한 《새인간연맹보》의 내용을 분석하지 않은 채 유신체제의 전위조직인 새인간연맹을 설명했다.

국가와 천도교와의 관계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박정희 정권이 당면했던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이 설명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정권이 당면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학과 천도교가 가진 역사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권의 이러한 전략에 천도교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정치와 종교의 상호작용이었다는 사실을 각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역사와 종교의 활용 양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논문은 박정희가 집권했던 1961~1979년을 연구 범위로 삼았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과 동학·천도교의 관계를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 박정희 이름으로 나온 저서, 연설문을 검토했으며, 화랑교육원에서 발간한 수련교재 등 다양한 1차 자료들을 주요 연구자료로 활용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천도교의 인식은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 《새인간연맹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12 박세준, 「천도교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국가와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169~261쪽.

Ⅲ. 5·16군사쿠데타와 동학혁명, 한일국교정상화와 3·1운동

1. 쿠데타를 혁명으로, 빨갱이에서 반공으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당일 저녁, 천도교의 신숙(申肅, 1885~1967)¹³은 서울중앙방송국에서의 방송을 통해 장면 정권을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정권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이 용감하고 애국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쿠데타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신숙은 “우리나라는 혁명적 수술 없이는 민족을 구출할 수 없기에 혁명거사들에게 구국제민을 위한 제반시책에 과감할 것을 촉구”했고, 반공민족세력을 총집결하여 혁명 완수와 거국적인 구국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¹⁴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 천도교 중앙총부는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난 5월 17일 군사혁명에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도교가 발표한 성명서는 군사혁명을 단순히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본 데 더하여 동학·천도교와 같이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선구적이며 희생적인 과업으로 설명했다.¹⁵

천도교는 종교계에서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빠르게 쿠데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천도교가 해방과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터득한 학습효과였다.

해방 이후 천도교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였다. 일제강점기 최린(崔麟)을 중

13 신숙은 천도교도로서 대구대교구장을 역임하고 천도교 대표로 중국에서 북경군사통일회 의장, 상해국민대표대회 부회장, 한국독립군 참모장을 역임한 상징성 있는 인물이었다.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6), 493~494쪽.

14 신숙, 「5·16혁명과 우리의 각오」, 《신인간》 20(1961), 8쪽.

15 천도교중앙총부, 「5·16군사혁명에 관한 성명서」, 《신인간》 20(1961), 85쪽.

심으로 한 신파로 최린에 반대하는 구파로 양분되었던 천도교는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내부의 교권 문제와 더불어 정치 노선의 갈등으로 인해 신·구파로 새로이 분열되었고, 남한에서 급속한 교세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신·구파 분열은 이전의 천도교 내부의 분열과 달랐다. 천도교가 정치세력화됨에 따라 천도교 내부에서 극심한 이념투쟁이 벌어졌다. 이전의 구파=진보, 신파=보수였던 대립구도는 해방공간 속에서 구파=보수, 신파=진보로 바뀌었고, 신파인 천도교청우당과 구파인 천도교보국당으로 갈리게 된다.¹⁶ 천도교 내의 진보세력은 김구(金九)와 함께 단정 수립을 반대하며 남북협상에 참석했다. 당시 북한에는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이 설립되어 있었고 교인의 규모나 교세가 남한보다 훨씬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 남북협상 참석 이후 남한의 천도교청우당 당직자들이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북한에 남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남한 종교계에서 천도교의 교세를 축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천도교 세력은 좌익으로 분류되어 미군정과 경찰로부터 검거를 당하게 되었다.¹⁷ 이승만 정권은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이 남한의 천도교를 적화시키기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남한의 천도교인들을 체포했다.¹⁸ 이런 상황 속에서 천도교는 내부에서 강력한 사상투쟁을 통해 좌파-빨갱이라는 낙인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서 주프랑스 한국공사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공진항(孔鎭恒)을 교령으로 추대했다. 이는 최고 통치자에 접근하는 전략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¹⁹ 이러한

16 천도교의 내부 분열에 대해서는 강인철, 『종속과 자율: 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a), 368쪽.

17 박세준, 「한국과 대만에서 반공과 종교의 상관관계: 한국 천도교와 대만 일관도」, 『아세아연구』 57-2(2014), 95~96쪽.

18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437~438쪽.

19 박세준, 앞의 논문(2015), 136~139쪽.

생존 전략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박정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최덕신을 교령으로 추대하는 등 박정희 정권에서도 재현된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세력은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세웠고, 이미 해방 이후 반공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증명을 반복해야 했던 천도교로서는 쿠데타에 대한 지지 표명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천도교는 5·16군사혁명을 “부패한 일체의 기성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참된 민중의 편에서 광범한 민중의 지지 호응”을 받고, “국민의 도의심(道義心)을 앙양(昂揚)하여 민족자주의 새로운 한국적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찾는 민주혁명과업으로 설명하며, 군사혁명에 정당성과 역사성을 부여했다.²⁰

쿠데타 이후 천도교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단연 ‘혁명’이었고, 천도교는 자신들의 교리와 혁명을 연결해서 군사혁명과의 친화성을 보이는 데 주력했다. 천도교는 자신들의 정신개벽을 ‘인간혁명’으로 설명하며 5월혁명과 연결했고, 5월군사혁명을 동학혁명-3·1혁명-4월학생혁명의 연장선에 놓았다.²¹ 또한 5월군사혁명을 동학혁명, 3·1혁명과 마찬가지로 민족혁명, 민주혁명을 내용으로 한 현대화의 혁명으로 설명하며 박정희의 혁명에 민족성과 민주성을 부여했다. 이렇듯 천도교는 자신들이 가진 민족 종교로서의 역사성을 군사혁명과 일체화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에게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천도교는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빨갱이’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장면 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통일 논의를 모두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교리와 반공이 친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했다.²² 그들은 공

20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글(1961), 85쪽.

21 장기운, 「국가재건사업수행에 관하여」, 《신인간》 21(1961), 2~5쪽.

22 동학민족통일회, 『민족통일 운동의 역사와 사상』(서울: 모시는사람들, 2005), 327~328쪽; 박세준, 앞의 논문(2015), 203~207쪽.

산주의의 최대 약점이 인간무시이기에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데도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³ 그러나 반공을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와 연결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의식했는지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워하는 종교나 사상은 찾아볼 수가 없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교파 사람들은 웃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워하는 사상은 오직 천도교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최대의 적이요 또 최후의 적은 천도교밖에 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① 3·1운동을 천도교가 영도했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 ② 갑오동학혁명을 농민전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천도교 사상이 반공통일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²⁴

천도교는 5·16군사혁명과 반공의 일체성 확립뿐 아니라 혁명을 위한 천도교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천도교인으로서 혁명정신의 순화(純化)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구세력이 연합하여 발생할 혼란과 무질서, 부패와 부정과 같은 반동(反動)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⁵ 또한 국가재건사업을 보국안민의 성업(聖業)으로 연결해 추진하고, 실천과 행동으로서 동귀일체(同歸一體)를 이루어 국가재건사업수행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²⁶ 1962년 민정이양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구정치인들의 활동 자유가 허용되던 정국 속에서 천도교는 지금을 ‘민족적 국가적으로 커다란 변전(變轉)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시기’로 보고, 교인들에게 과거와 같이 방관만 하지 않고 민족증흥의 대업을 진행하는 혁명정부에 선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²⁷

23 최인, 「한국혁명의 기본방안」, 《신인간》 23(1962), 58-59쪽.

24 백세명, 「천도교는 한국의 국교다: 아직도 어렵고 병약한 민족자를 잘 키워야 한다」, 《신인간》 27(1963), 22-23쪽.

25 이응진, 「변혁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 《신인간》 23(1962b), 70-71쪽.

26 신인간, 「국가재건사업수행에 관하여」, 《신인간》 20(1961), 86쪽.

27 이응진, 「민정이양을 전망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논함」, 《신인간》 25(1962a), 29-31쪽.

한편, 박정희 정권은 동학과 천도교를 현실의 종교세력보다는 역사적 대상으로 취급했다. 동학과 천도교에 대한 박정희의 인식은 박정희 이름으로 나온 저서들에 잘 나타나 있다. 동학에 대한 박정희의 인식은 1962년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 나온다. 이 책에서는 동학혁명을 ‘동학민란’이라 표현했고, 동학민란이 가지는 의의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동학은 “우리나라 근대 민중혁명의 효시로서 「보국안민(保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의 민중사상과 척양척왜의 반식민지 민족주의”라는 것이다. 둘째, 조선의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지도세력이 농민대중 속에서 싹텄고, 서구의 근대화와 견줄 수 있는 농민혁명이 동학에 의해 시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동학의 인내천과 사천여천(事天如天)과 같은 사상은 서구사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주체적인 사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한국화를 위한 정신적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동학을 화랑도에서부터 시작하는 민족정신을 계승한 주체적 사상의 계보에 넣었으며 이를 3·1운동, 4·19혁명을 넘어 박정희 자신의 5·16군사쿠데타에까지 연결했다.²⁸ 박정희는 3·1독립운동을 “東學民亂 이래 封建的 身分制를 제거한 民衆的 抗爭으로 近代의 自覺의 표시”²⁹로 설명하며 동학을 3·1운동과 연결했다.

동학에 대한 이러한 서술을 통해 박정희는 자신의 5·16군사쿠데타를 한국 사회의 재건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도교가 동학의 후신이라는 점이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고자 했던 정권의 의도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실의 천도교는 교세가 미미해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지만 동학과 천도교가 가진 역사성은 그 활용 가치가 높았다.

28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갈 길』(서울: 동아출판사, 1962), 114~115쪽.

29 위의 책, 123쪽.

박정희가 동학과 관련된 행사에 가장 먼저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63년 10월 3일 전라북도 정읍 황토현에서 열린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기념식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박정희는 자신을 동학농민군의 아들로 자칭했고, 동학농민전쟁을 ‘혁명’으로 명명하며 자신이 그 정신의 계승자임을 천명했다.

전봉준선생이 이 정읍고를 말목장터 감나무 아래에서 징을 울려 농민을 동원하던 심정이나 내 자신이 2년 전 5·16에 한강다리를 넘어설 당시의 심정은 동일한 대조인가 합니다. 시대와 과업의 양상은 좀 다를지 몰라도 혁명의 정신과 이념은 똑같은 입장인 줄로 생각합니다. … 내 자신도 동학군의 아들입니다. 선친께서 동학혁명 당시 진두에서 싸우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었으나 요행으로 살아 남아서 나와 같은 자식을 낳아 주셨습니다. 생각컨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거의가 다 동학군의 후손들이 아닌가 합니다. … 앞으로 이 정신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혁명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³⁰

이 시기 박정희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로당 이력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날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박정희의 육성으로 동학이 민란에서 ‘혁명’으로 확인되고, 그 주역들이 추앙되었으며, 최고 권력자가 그 정신의 계승을 통한 현재성을 담보해 주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이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동학과 천도교 관련 행사에 직접 참가하거나 행사 관련 비용을 전달했고, 관련 기념물에 글씨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30 박정희, 「치사」, 《신인간》 29(1963b), 9쪽.

2. 친일 정권이라는 오명 벗기

박정희 정권은 5·16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학‘혁명’이라는 역사성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성을 활용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으로 인한 정치적, 외교적 난관을 타개할 필요가 있을 때 손병희를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자 3·1운동의 영도자로 부각했고, 천도교가 가진 3·1운동 정신과 자주성을 자신의 정권에 투영하고자 했다.

박정희는 손병희를 3·1운동의 영도자로 높이며 손병희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했다. 1962년 5월 19일 거행된 손병희 40주기 추념식에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냈고,³¹ 1963년 의암성사(손병희) 41주기 추도식에 추념사를 했다(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인 홍종철이 대독). 이날 추념사에서 박정희는 “3·1운동을 주도하신 불굴의 독립투사”로 칭송하며, “(손병희) 선생의 기록하신 유지를 받들어 국가재건의 민족중흥을 이룩하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성취코저 우리의 열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³²

1965년 5월 19일 손병희 43주기 추념식과 함께 손병희 동상 건립기공식이 거행되었는데 박정희는 손병희 동상 건립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동상 건립에 50만 원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손병희의 부인 주옥경(朱鈺卿)에게도 50만 원을 전달했다.³³ 박정희 정권은 1966년 국무회의를 통해 3·1운동 33인의 민족대표 중 7명의 천도교인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결의했고, 5월 18일 합동이장식을 거쳐 국립

31 신인간, 「의암성사환원 40주기추념식업수」, 《신인간》 23(1962), 46쪽.

32 박정희, 「추념사」, 《신인간》 27(1963a), 63쪽.

33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481쪽.

묘지로 이장했다.³⁴

천도교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논의되고 있던 시점에도 박정희 정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천도교는 박정희 정권에게 덧붙여진 ‘친일 정권’이라는 오명을 3·1정신과 손병희에 대한 박정희의 선양(宣揚)을 통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천도교는 일부 신문에 천도교가 한일협정비준반대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도된 데에 대하여, 찬반 양론의 내용을 설명하며 찬반 양측 모두 한일국교정상화의 필요성만은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과거 누구보다 일제의 피해가 컸기에 천도교라면 일본과 상종조차 하기 싫은 마음이지만 위대한 시야에서 국가민족의 장래를 염려해야 할 것이며, 천도교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대국적 견지에서 한일협정을 보며(찬성하며) 천도교인이 민족적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전국민의 선두에 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³⁵

천도교는 자신들의 역사성을 제공하여 박정희 정권이 한일국교정상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박정희 정권과 천도교는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천도교가 새로운 교령을 선출하면서 정권과 천도교의 밀월관계는 한층 공고화된다.

이승만 정권에서 주프랑스 한국 공사와 농림부 장관을 했던 공진항 교령에 이어 교령이 되었던 신용구(申鏞九)가 1967년 2월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천도교는 4월 3일 교령 선출을 위한 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서 “과거 수년간 대외적으로 경제난과 인물 빈곤으로 천도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대에 맞게 참신하고 대외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교령으로 선출

34 위의 책, 485쪽.

35 천도교중앙총부, 「전국 천도교인에게 고향: 한일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하여」, 《새인간》 3(1965), 2~3쪽.

하자”는 의견이 모였다.³⁶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4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교령 선거에서 113명 중 107명의 찬성을 받아 박정희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덕신을 선출한다.

최덕신은 천도교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최동오(崔東旰)의 아들로 1914년 중국에서 태어났다.³⁷ 최덕신은 장제스(蔣介石)가 교장으로 있던 중국 육군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했고 해방 이후 육군사관학교 3기(특별반)로 들어왔으며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교장 시절 그가 지도했던 생도가 바로 김종필(金鍾泌)을 비롯한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인 8기생들이다. 이후 그는 한국전쟁 휴전회담에서 UN군 한국군 대표를 역임했고 중장으로 예편한 후 1958년 월남대사를 지냈다. 5·16군사쿠데타 후인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1963년부터 서독대사를 맡았다. 천도교가 그를 교령으로 선출하던 날 그는 서독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 잠시 귀국한 상황이었다.

최덕신은 천도교의 결정을 수락하고 곧 서독에서 귀국해 교령직을 맡았다. 최덕신은 귀임인사에서 천도교의 교세가 침체된 것을 지적하고 동귀일체를 강조하며, 교령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³⁸ 그리고 최덕신은 박정희 정권이 이야기했던 민족의 중흥을 천도교의 중흥으로 변주함으로써 박정희 정권과 가까운 새 교령의 취임을 통해 교회의 약진을 바라는 교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했다.³⁹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천도교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자, 박정희 시대에 발맞춰 정권의 요구를 잘 이해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36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490쪽.

37 최동오는 김일성의 화성의숙 재학 시절 스승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일성과의 관계는 이후 1986년 최덕신이 월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38 최덕신, 「귀임인사」, 《새인간》 16(1967), 3~5쪽.

39 김명진, 「약진하려는 교회의 전망과 계획: 최교령님의 취임식을 보고」, 《새인간》 16(1967), 9~13쪽.

대변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최덕신을 선택했다. 이승만 정권에서 공진항을 교령으로 추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도교는 다시 한번 박정희와 인연이 깊은 최덕신을 교령으로 추대함으로써 최고 통치자에 접근하는 전략을 통한 생존을 재차 시도했다. 또한 새로운 교령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교령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교령중심제로 교헌을 개정했다.⁴⁰

최덕신을 교령으로 삼은 천도교 측은 정권에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천도교는 한일회담 체결 후 조국 광복의 역사에 천도교의 비중이 어느 단체보다 크고 일제에게 많은 인명과 물질적 피해를 입은 만큼, 전부는 아니더라도 개벽사와 보성사의 직접 피해에 대해서만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최덕신에게 위임한다.⁴¹ 또한 삼일대로의 확장으로 인해 대신 사출세백년기념관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도로계획 반대를 결의했던 천도교는 최덕신이 교령이 된 후 다시 한 번 도로의 변경을 통해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권에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원하는 것들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천도교 측은 이전 비용 등 부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과 천도교의 관계는 유신체제기에 접어들어 더욱 밀접해진다. 유신정권은 동학을 근대적 민족종교로 부각하고,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를 삼국통일의 주축이었던 화랑의 후예로 강조하고, 동학과 관련된 성역화사업을 벌이면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자로 자임했다. 천도교에서는 기관지를 통해 즉각 유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 협력을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유신(惟新)된 국민 생산 프로젝트를 앞장서 실행했다.

40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479쪽; 박세준, 앞의 논문(2015), 209쪽.

41 최덕신, 「건의문」, 《새인간》 18(1968), 40~41쪽.

IV. 유신체제와 천도교의 동귀일체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은 근대적 민족종교인 동학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되, 동학혁명 실패의 원인이 지도력의 부재와 총화단결의 부족에 있었다고 진단한다. 이 진단에 따르면, 유신이라는 그들의 새로운 혁명의 성공에는 강력한 지도력과 국민들의 총화단결이 요구되었다. 정권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동학의 역사와 천도교라는 현실종교를 활용했고, 천도교는 이러한 정권의 요구에 한층 노골적이고 종속적으로 협력했다. 이미 자신들의 사상인 동귀일체를 5·16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했던 천도교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곧이어 교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민족주체성의 확립’, ‘근대화’, ‘승공통일’을 위한 새인간연맹을 창설했는데, 이는 사실상 유신의 전위단체이자 종교관 새마을운동으로 유신의 이념에 맞는 국민 생산 프로젝트였다.

1.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동학·천도교의 역할

1) 근대적 민족종교 동학

박정희 집권 초기 동학과 천도교가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친일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성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196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체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학은 ‘한국적인 것’의 표본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동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인식은 1971년 박정희 이름으로 나온 『민족의 저력』에 잘 나타나 있다.⁴² 이 책은 1962년의 『우리 민족

42 『민족의 저력』에서의 한국사 전반에 걸친 역사인식에 박정희의 역사 교사이자 1973년 공주 우금치에 세워진 ‘동학혁명군위령탑’의 글을 쓴 이선근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선근은 1950년대 천도교 교령을 지냈던 공진향과 친구 사이였고, 천도교와 관련된 다양한 행

의 나갈 길』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정당성을 역사를 통해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민족의 저력』에서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 비해 동학에 대한 서술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점에서 동학에 대한 정권의 관심과 변화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민족의 저력』에서는 첫째, 동학을 종교사상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것은 이전 책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특징으로 동학에 대한 박정희의 인식이 변했음을 보여준다. 박정희는 동학을 한국 고유 신앙에 근본을 두고 유교·불교·도교를 종합하여 기독교에 대립한 사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동학은 서학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에 대립적인 의미로 동학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교리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한다.⁴³

둘째, 동학에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위기에서 조국을 수호하고자 한 민족적 주체정신과 민주적 자유정신이 담겨 있다고 봤다. 그리고 동학교도들이 내세웠던 12개조의 폐정개혁 조목은 갑신정변 때의 혁신 정책보다 훨씬 강렬한 근대화를 갈망하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설명했다.⁴⁴ 그러나 동학에 대해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동학을 성공한 혁명으로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갑오동학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결론지었다. 단결력의 불충분, 내외의 정치 정세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의 결여, 민중에 대한 조직과 훈련의 부족이 그 문제점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도력의 빈곤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⁴⁵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지도력은 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된다.

사에 참여했다.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508~509쪽.

43 박정희, 『민족의 저력』(서울: 광명출판사, 1971), 40~41쪽.

44 위의 책, 42쪽.

45 위의 책, 43쪽.

셋째, 『민족의 저력』에서는 동학뿐 아니라 천도교도 짧게나마 다루는데,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에 언급된다. 박정희는 3·1운동에 관해 당시 한국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천도교의 손병희를 비롯하여 기독교 및 불교계의 지도적 인사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것으로 서술했다.⁴⁶ 그리고 3·1운동을 계획하고 이끈 인사들을 “근대적 의식을 각성하고 민족의식에 투철한 당시의 민족 엘리트”로 설명했다.⁴⁷ 천도교 교령 손병희는 한국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특칭되었고, 근대성과 민족성을 가진 민족 엘리트의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2) 화랑의 후에 최제우

동학사상에 대한 강조 및 정권의 이데올로기와의 연결은 학생 교육에서도 드러난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주의를 교육을 통해 주입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애국적 국민을 생산하기 위해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했고,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정의했으며, 자주와 지도자를 통한 국난극복을 강조하기 위해 1971년 경주에 화랑교육원이라는 학생 수련기관을 건립했다.⁴⁸ 화랑교육원에서는 동학을 화랑도와도 연결해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와 동학사상을 가르쳤다.

화랑교육원의 수련 교재인 『화랑정신』에서는 동학사상과 화랑도를 연결했고,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를 최치원(崔致遠), 김유신(金庾信)과 같은 신라의 역사 인물과 연관해 설명했다. 최제우가 자신의 도를 설명한 내용이 최치

46 위의 책, 58~59쪽.

47 위의 책, 60쪽.

48 최광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2014).

원이 「난랑비서문」에서 화랑도를 유교, 불교, 도교의 조화와 통합으로 설명한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제우가 최치원의 후손인 점을 강조하며 이 둘의 사고 방식이 우리 것을 내세운 민족적 자각이 앞선 사람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고 설명했다.⁴⁹ 그리고 최제우는 민족 의식이 강하고 민족적 자각이 투철한 사람으로 새로운 민족의 진로를 찾기 위해 동학을 세상에 내어놓은 사람으로 묘사했다.⁵⁰ 그리고 최제우의 득도수련을 김유신의 수도설화와 연결하면서 이 둘의 수련을 구국의 일념에서 시작되었고 민족적 고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⁵¹ 최제우가 검결(劍訣)을 짓고 검가(劍歌)를 지어 부르며 칼춤을 춘 사실은 상무(尙武) 정신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⁵²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인내친 사상을 가진 동학이 밀받침되었고, 동학혁명에는 서구 열강과 신흥 일본의 세력에 침략을 당할 위기에 있는 민족 문화와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민족 주체 정신과 귀족층의 압정에 시달린 시민 계급 특히 농민에게 만민 평등의 복음을 주자는 민주적 자유 정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⁵³ 동학을 혁명으로 불리야 하는 이유는 “그들(동학군)에겐 사상이 있었고, 그 사상은 행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의 난이라 하지 않고, 비록 실패는 했을망정 동학혁명이라 부른다.”라고 했다.⁵⁴

그러나 화랑교육원 교재에서는 『민족의 저력』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학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규정했다. 동학군의 혁명정신은 위대하지만 지도층의 정세에 대한 부족한 식견과 통찰력, 총화단결의 부족으로 혁명은 실패했다

49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화랑정신』(대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 135쪽.

50 위의 책, 131쪽.

51 위의 책, 136~137쪽.

52 위의 책, 137쪽.

53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수련교본』(대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8), 45~46쪽.

54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앞의 책(1972), 141쪽.

는 설명이다.⁵⁵ 그렇다면 반대로 지도력과 총화단결은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때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된다. 지도자 중심주의, 그리고 총화단결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 이데올로기였던 만큼, 이러한 서술에는 결국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박정희 정권은 동학의 민족주체성, 근대성,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그 정통성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한편,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제 옹호를 위한 자원으로 동학의 역사를 활용한 것이다. 동학에 연원을 둔 천도교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성지 성역화 등 일련의 정책을 실행한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동양의 예루살렘 구미 용담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던 박정희 정권은 경주에 있는 동학과 관련된 성역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⁵⁶ 1971년 경주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정해지자 천도교에서는 구미산 환경개발에 착수하고, 구미성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한다.⁵⁷ 최덕신은 천도교 성지인 구미산 개발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한다.⁵⁸ 구미산 일대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풍경이 아름다워 관광지로도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곳까지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부터 많은 교인들의 구미산 순례가 이

55 위의 책, 143쪽.

56 1968년 4월 정읍에서 시작된 갑오동학혁명기념제를 개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담당자가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천도교 교령 최덕신을 찾아갔는데 이때 최덕신은 “박 대통령께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살핀다고 해서 경주 쪽으로는 상당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최제우 관련 유적이 있는 경주 용담에 국가가 지원해 몇 가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편),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서울: 갈채, 2006), 132~133쪽.

57 최덕신, 「구미성지개발 특성모금 취지문」, 《신인간》 297(1972a), 109~110쪽.

58 최덕신, 「천도교성지(경주구미산)개발에 대한 건의문」, 《신인간》 301(1972c), 59~60쪽.

어졌고, 1972년부터 구미산 성지 회복이 천도교의 목표가 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경주 개발에 맞춰 동학과 관련된 성역화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동학과 관련된 유적들이 있는 토지가 시천교 소유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시천교의 교세가 기울면서 용담성지 관리 운영이 어려워졌고, 천도교가 1971년 10월 27일 구미산 일대의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1972년 5월 11일 명의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구미산은 천도교에 귀속되었다.

경주 구미산에 있는 용담정(龍潭亭)은 천도교의 발상지이며, 동학과 천도교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성지였다. 박정희 정권 역시 경주 구미산 천도교 성지를 “韓國民主主義思想의 효시라 할 수 있는 東學의 發祥地이며 東洋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다.⁵⁹

박정희 정권은 구미산 천도교 성지에 천도교의 사상적 배경과 민족주체 사상 및 민권운동의 정신이 나타나도록 개발한다는 목적 아래 1974년 10월 11일 구미산 일대의 천도교 유적지를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키고 이 일대를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했다.⁶⁰ 박정희는 1975년부터 용담정을 비롯한 최제우 관련 유적이 있는 경주 가정리 일대를 성역화할 것을 결정하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박정희의 지시를 담은 내용을 김정렴(金正濂) 대통령비서실장이 최덕신에게 보냈다. 김정렴이 최덕신에게 전달한 지시에는 박정희가 동학의 성지인 구미산 일대를 경주 국립공원구역에 포함시키고, 유적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유적지의 보수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⁶¹

1975년 10월 28일 천도교의 성지인 용담정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박정희

59 경주개발건설사무소,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지』(서울: 건설부, 1979), 1040쪽.

60 위의 책, 1043쪽.

61 최덕신, 「구미용담 성역화와 우리의 자세」, 《신인간》 323(1975), 28~29쪽.

는 친필로 용담정 일대의 건물들에 ‘龍潭亭’, ‘龍潭修道院’, ‘布德門’, ‘聖化門’이라고 현판 휘호를 써 주었다.⁶² 낙성식에는 최덕신을 비롯한 천도교의 주요 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리고 용담정 중건기는 국민교육헌장 작성에 참여했던 박종홍이 썼다. 이 중건기에는 최덕신의 청원에 의해 용담정 성지화가 시작되었고, 이를 승인하고 용담정 주변을 국립공원으로 개발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박정희임을 명시하고 있다.⁶³

박정희 정권은 천도교 성지의 성역화사업을 통해 동학을 한국 민주주의 사상의 효시로 공인했고, 민족주체사상이자 민권운동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방문자들이 학습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들과 성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학의 역사를 정권과 연결 지어 교육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동학의 역사를 통해 국민들을 정치사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천도교는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2. 유신과 새인간

박정희 정권이 3선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진행했던 1969년, 천도교는 8월 20일에 「항구적 정국안정을 위한 우리의 제언」을 발표하며 박정희의 3선개헌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항구적 정국안정을 위한 우리의 제언」에서는 첫째, 현 정국이 안정되어야 굳건한 반공권이 유지되어 북한의 남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동학혁명을 민주혁명으로 인정하고 순국선열의 공훈을 훈상(勳賞)하고 민족의 애국정신을 양양케 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라는 점, 셋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볼 수 있기에

62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541쪽.

63 위의 책, 542~543쪽.

그것을 굳이 막으려 함으로써 정국을 혼란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헌을 위한 찬반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⁶⁴

천도교는 국민정신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천도교 내에 단체를 결성했다.⁶⁵ 1969년 12월 11일에는 새인간 창조를 통한 조국의 근대화와 국토통일 운동을 위한 사회단체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1970년 4월 4일 국민정신통일을 위한 운동을 계승한 ‘새인간운동’이 발족되었다.

천도교의 새인간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후반부터 내세웠던 ‘주체적 민족사관’과 결합했다. 천도교는 개성(個性)은 민족 혹은 국가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리는 삶의 태도를 주체적 자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개개인의 주체적 자각의 확립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도 확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체적 자각을 가진 사람을 ‘새인간’으로 정의했다.⁶⁶

새인간운동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혼인 자주혼을 망각하고 외래사상, 외래문화와 같은 외래 풍조와 권력에 물들지 않도록 산 혼(生魂)을 불어넣는 운동으로 규정되었다.⁶⁷ 또한 민족의 전통적 신앙에서 새 인간을 찾아야 한다며 화랑도를 민족 고유의 정신으로 보고 이를 동학혁명뿐 아니라 새인간운동과도 연결했다.⁶⁸

천도교는 1960년대에 이룬 조국 근대화를 전제로 한 경제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970년대는 무엇보다도 주체성이 확립된 새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

64 천도교중앙총부, 「정국안정에 대한 제언」, 《신인간》 268(1969), 64~65쪽.

65 백세명, 「국민정신통일안」, 《신인간》 270(1969), 40~44쪽.

66 최동희, 「새 인간과 주체적 자각」, 《새인간연맹보》 2(1970), 3쪽.

67 김용문, 「새시대의 새인간상」, 《새인간연맹보》 2(1970), 5쪽.

68 김용경, 「화랑도와 새인간운동」, 《새인간연맹보》 7(1971), 10~11쪽.

에 부과된 경제적 안정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명을 다하는 인간을 ‘새인간’으로 설명했다.⁶⁹

최덕신은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인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인간연맹의 발기를 선언하고 자신이 직접 새인간연맹의 총재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천도교가 본격적으로 정권을 위한 전위대로 역할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새인간연맹은 ‘주체성 확립’, ‘근대화’, ‘승공통일’을 목적으로 내세운 천도교 사회운동 단체였지만 사실상의 유신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정권의 전위조직이었다.

표2-새인간연맹 강령⁷⁰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인간을 소외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참된 주체성을 회복하기로 한다. 1.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현대의 과학기술을 선용하여 생활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적 소양을 쌓기로 한다. 1. 우리는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성실과 공경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건실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로 한다. 1.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민족적 자각으로 자주적 민족통일을 구현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기여코자 한다. |
|---|

표3-새인간연맹 생활실천 요강⁷¹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간 꼭 지키기 2. 좋은 책 많이 읽기 3. 참된 말, 멋진 말 쓰기 4. 깨끗하고 검소한 몸차림 가지기 5. 예의범절 바로 지키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헛되고 나쁜 풍습 바로 고치기 7. 외래 사치품 안 사기, 안 쓰기 8. 뇌물 안 주고 안 받기 9.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기 10. 하루 3천 걸음 이상 걸어다니기 |
|---|--|

69 김용천,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인간 운동」, 《새인간연맹보》 3(1970), 8~9쪽.

70 새인간연맹, 「강령」, 《새인간연맹보》 3(1970a), 15쪽.

71 새인간연맹, 「생활실천 요강」, 《새인간연맹보》 3(1970b), 15쪽.

새인간연맹 총재인 최덕신은 새인간연맹의 사업 목적이 “사회정화운동이며 도의운동이며 신생활운동이며 대중계몽운동”이라고 밝혔다.⁷² 이러한 사업목적에는 기존의 천도교의 교리가 전혀 표명되지 않았으며, 새인간연맹의 운동은 사실상 종교관 ‘새마을운동’이었다. 새인간연맹본부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이선근·박종홍·이은상 등을 고문으로 임명했고, 새인간연맹원들에게 새마을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새인간정신을 고취하도록 했다.⁷³

1971년 12월 6일 박정희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천도교는 사흘 뒤인 12월 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덕신 명의의 이 담화문에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여 취한 조치이기에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으며, 비상사태 선언 발표는 전쟁예방 조치이기 때문에 지나친 위기의식을 가지거나 공포·불안 등의 국민 사기를 저하하는 언동을 삼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천도교인들은 중대 시기에 당황하지 않는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며, 경솔한 행동을 지양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는 등 동귀일체에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⁷⁴ 최덕신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10월유신이었다고 밝히며 10월유신이 3·1정신의 계승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정신개벽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⁷⁵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의 중의제’로 설명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통해 박정희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자 한 유신체제에 힘을 실어 주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나 국회 등의 참여기구에 많은 천도교인이 참여하거나 직접 참여가 어려울 경우 참여기구에 있는 인사에게 적

72 최덕신, 「지부조직의 방향」, 《새인간연맹보》 2(1970), 1쪽.

73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506쪽.

74 신인간, 「교령님 담화문: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우리의 자세」, 《신인간》 292(1971), 76~77쪽.

75 최덕신, 「民族主體性 확립을 위해」, 《새인간연맹보》 24(1972b), 2~3쪽.

극적으로 영향력을 주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⁷⁶

1972년 박정희의 10·17대통령특별선언에 대해서도 천도교는 이를 뒤인 10월 19일, 10월유신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⁷⁷ 12월 6일, 천도교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10월유신에 대한 당면좌표를 제시한 결의문을 발표했다.⁷⁸ 이 결의문은 천도교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협력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국가에 교단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천도교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슬로건 아래 조국의 영광된 평화 통일과 내일의 보다 알찬 번영을 위해 천도교인들이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⁷⁹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육영수(陸英修)가 문세광(文世光)에게 피살되자, 9월 8일 새인간연맹중앙본부는 탑골공원 손병희 동상 앞에서 ‘8·15사건 진상 규명 규탄대회’를 열었고, 안국동 일본대사관까지 시위행진을 하며 일본 정부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후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⁸⁰ 천도교는 전위조직인 새인간연맹을 통해 유신체제를 적극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천도교 내부의 분규⁸¹로 인해 최덕신이 1976년 미국으로 떠나면서 박정희 정권과 동학·천도교의 관계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1977년 11월 18일 천도교는 일본에 있는 한민통이라는 반한(反韓)단체 사무실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등 반민

76 최창과, 「통일과 광제창생」, 《신인간》 301(1972), 14~18쪽.

77 신인간, 「十月維新에 대한 聲明書」, 《신인간》 301(1972), 79쪽.

78 제12차임시천도교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문」, 《신인간》 302(1972), 52~53쪽.

79 수송, 「편집후기」, 《신인간》 301(1972), 99쪽.

80 편집실, 「八·一五事件 真相糾明糾彈大會」, 《새인간연맹보》 44(1974), 12~13쪽.

81 1975~1976년 사이의 교단 분규와 이로 인해 최덕신이 교령을 사퇴하고 이후 월북하는 과정에 대해 천도교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교단 분규의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동초(편저), 『동학·천도교편년사』(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족적이고 반국가적인 망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덕신 전 교령에 대한 출교 처분을 내린다.⁸² 그리고 유신체제에서 천도교의 전위조직인 새인간연맹도 총재인 최덕신 교령이 사퇴하면서 해체되었다.⁸³ 최덕신 출교 이후 천도교는 새로운 교령을 선출했고, 박정희 정권과의 유착관계는 끝나게 된다.

V. 맺음말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동학과 천도교가 가진 역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분단을 거치면서 남한의 천도교는 교세가 크게 위축되기는 했으나 동학이 지니는 독특한 역사적 위상으로 말미암아 박정희 정권에서 적지 않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과 천도교와의 관계는 당대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인한 정당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천도교를 포섭하고 동학과 3·1운동의 역사성을 활용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5·16군사쿠데타를 동학혁명과 일체화함으로써 민족정신을 계승한 주체적 사상의 계보에 연결했고, 한국 사회의 재건과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으로 정당화시켰다. 또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친일정권’이라는 오명을 3·1운동에 가담했던 손병희에 대한 선양(宣揚)을 통해 벗고자 했다. 그리고 동학을 민족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둔 한국 고유의 신앙으로 숭상함으로써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선포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다.

82 천도교중앙총부감사원, 「전 교령 최덕신도정 출교처분」, 《신인간》 353(1977), 29쪽.

83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507쪽.

한편, 천도교는 교단의 생존과 중흥을 위해 박정희 정권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천도교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에서 생존하기 위해 첫째,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빠른 지지를 통해 박정희 정권에서 생존하고자 했다. 둘째, 천도교 교리를 통해 정권과의 친화성을 찾는 작업을 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사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들을 교단에서 변주(變奏)하면서 정권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천도교가 박정희 정권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덕신을 교령으로 선택하는 등 정권과 연관된 인물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지원과 동학 성지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추진했다.

천도교는 정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전위조직을 꾸림으로써 교단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약화된 교세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호전략을 국가와 종교를 포섭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한 정당성 확보라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의 외연을 종교에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박정희 정권이 천도교에 주목한 것은 현실종교의 교세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종교의 역사성이 정당성 주장에 활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천도교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동학혁명과 3·1운동의 대표성 있는 인물로서의 손병희와의 연속성, 즉 천도교의 역사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천도교는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교리 내로 흡수하고 전위조직을 만들어 어느 종교보다도 적극적으로 정권에 동조했다. 천도교에서 제시한 ‘새인간’은 박정희 정권의 역사를 활용한 정당성 확보가 국민 생산 프로젝트로 확대될 때 탄생할 ‘유신(維新)된 인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진행하지 못했지만 천도교와 국가의 관계는 천도교와 북한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북한 정권에서 공식적 활동이 인정되는 유일한 종교는 천도교인데, 이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도 동학·천도교는 활용되었다. 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북한과 남한 정권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연구 주제이다. 1985년 최덕신이 부인과 함께 월북한 이후 1997년 오익제 전 교령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덕신의 아들 역시도 2019년 월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천도교는 남북관계에서 매우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최덕신과 김일성의 관계에서 본 것처럼 최덕신을 중심으로 천도교-남한-북한의 관계를 새로이 재구성해 보는 것 역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논저

-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의 서술과 그 문제점」, 『2001정책연구보고서』, 2001.12.
- 강인철, 『종속과 자율: 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a.
-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b.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화랑정신』, 대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수련교본』, 대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8.
- 경주개발건설사무소,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지』, 서울: 건설부, 1979.
-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역사학연구소 1894년 농민전쟁연구반(편),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서울: 거름, 1994, 13~104쪽.
- 동학민족통일회, 『민족통일 운동의 역사와 사상』,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5.
-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51, 1997, 41~74쪽.
- 박세준, 「한국과 대만에서 반공과 종교의 상관관계: 한국 천도교와 대만 일관도」, 『아세아연구』 57-2, 2014, 87~107쪽.
- 박세준, 「천도교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국가와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서울: 동아출판사, 1962.
- 박정희, 『민족의 저력』, 서울: 광명출판사, 1971.
- 오제연,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대학생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역사문제연구』 33, 2015, 175~217쪽.
- 이동초(편저), 『동학·천도교편년사』,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편),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서울: 갈채, 2006.
-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6.
- 최광승, 「박정희의 慶州古都 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 126, 2012, 183~214쪽.
- 최광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2014, 237~275쪽.
- 최광승, 「창조된 문화유적' 경주 통일전: 유신을 위한 국민교육도장」, 『역사문제연구』 40, 2018, 419~456쪽.

최광승, 「박정희 유신체제와 해계모니 권위주의 정당성: 성역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 기타

김명진, 「약진하려는 교회의 전망과 계획: 최고령님의 취임식을 보고」, 《새인간》 16, 1967, 9~13쪽.

김용경, 「화랑도와 새인간운동」, 《새인간연맹보》 7, 1971, 10~11쪽.

김용문, 「새시대의 새인간상」, 《새인간연맹보》 2, 1970, 4~5쪽.

김용천,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인간 운동」, 《새인간연맹보》 3, 1970, 8~9쪽.

박정희, 「추념사」, 《신인간》 27, 1963a, 63쪽.

박정희, 「치사」, 《신인간》 29, 1963b, 9쪽.

박정희·이선근, 「탑문」, 《신인간》 312, 1973, 78~79쪽.

백세명, 「천도교는 한국의 국교다: 아직도 어렵고 병약한 만득자를 잘 키워야 한다」, 《신인간》 27, 1963, 20~25쪽.

백세명, 「국민정신통일안」, 《신인간》 270, 1969, 40~44쪽.

새인간연맹, 「강령」, 《새인간연맹보》 3, 1970a, 15쪽.

새인간연맹, 「생활실천 요강」, 《새인간연맹보》 3, 1970b, 15쪽.

수송, 「편집후기」, 《신인간》 301, 1972, 99쪽.

신숙, 「5·16혁명과 우리의 각오」, 《신인간》 20, 1961, 8쪽.

신인간, 「국가재건사업수행에 관하여」, 《신인간》 20, 1961, 86쪽.

신인간, 「의암성사환원 40주기추념식염수」, 《신인간》 23, 1962, 46~47쪽.

신인간, 「교령님 담화문: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우리의 자세」, 《신인간》 292, 1971, 76~77쪽.

신인간, 「十月維新에 대한 聲明書」, 《신인간》 301, 1972, 79쪽.

이용진, 「민정이양을 전망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논함」, 《신인간》 25, 1962a, 29~31쪽.

이용진, 「변혁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 《신인간》 23, 1962b, 68~71쪽.

장기운, 「국가재건사업수행에 관하여」, 《신인간》 21, 1961, 2~5쪽.

제12차임시천도교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문」, 《신인간》 302, 1972, 52~53쪽.

천도교중앙총부, 「5·16군사혁명에 관한 성명서」, 《신인간》 20, 1961, 85쪽.

천도교중앙총부, 「전국 천도교인에게 고함: 한일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하여」, 《새인간》 3, 1965, 2~3쪽.

- 천도교중앙총부, 「정국안정에 대한 제언」, 《신인간》 268, 1969, 64~65쪽.
- 천도교중앙총부감사원, 「전 교령 최덕신도정 출교처분」, 《신인간》 353, 1977, 29쪽.
- 최덕신, 「귀임인사」, 《새인간》 16, 1967, 2~5쪽.
- 최덕신, 「건의문」, 《새인간》 18, 1968, 40~41쪽.
- 최덕신, 「지부조직의 방향」, 《새인간연맹보》 2, 1970, 1쪽.
- 최덕신, 「구미성지개발 특성모금 취지문」, 《신인간》 297, 1972a, 109~110쪽.
- 최덕신, 「民族主體性 확립을 위해」, 《새인간연맹보》 24, 1972b, 2~3쪽.
- 최덕신, 「천도교성지(경주구미산)개발에 대한 건의문」, 《신인간》 301, 1972c, 59~60쪽.
- 최덕신, 「구미용담 성역화와 우리의 자세」, 《신인간》 323, 1975, 28~31쪽.
- 최동희, 「새 인간과 주체적 자각」, 《새인간연맹보》 2, 1970, 2~3쪽.
- 최인, 「한국혁명의 기본방안」, 《신인간》 23, 1962, 53~59쪽.
- 최창과, 「통일과 광제창생」, 《신인간》 301, 1972, 13~20쪽.
- 편집실, 「八·一五事件 真相糾明糾彈大會」, 《새인간연맹보》 44, 1974, 12~13쪽.

국문초록

박정희 정권은 역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실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동학과 천도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각 정치적 국면에 따라 검토하면서 정권과 현실 종교의 상호작용을 드러내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동학과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근대화’와 ‘자주’,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활용해 ① 5·16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②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고, ③ 유신체제를 강고화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은 스스로를 동학혁명의 계승자로 자처하며 그 역사성을 전유하여 동학혁명을 재평가하고 역사를 재서술했으며, 학생 교육과 성역화사업을 시행했다. 교세가 약했던 천도교 측은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천도교는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빠른 지지와 함께 박정희와 관계가 깊은 최덕신을 교령으로 선출하며 정권에 협력했다. 또한 정권의 유신체제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교리와 일체화했고, 전위조직을 구성해 정권에 순응하며 천도교의 생존을 모색했다.

투고일 2023. 12. 20.

심사일 2024. 1. 23.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박정희 정권(Park Chung-hee regime), 동학(Donghak), 천도교(Cheondogyo), 동학혁명(Donghak revolution), 성역화(sanctification)

Abstract

How the Park Chung-hee Regime Used Donghak and Cheondogyo

Choi, Kwangseung

The use of history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and address moments of crisis by the Park Chung-hee regime has been acknowledged in prior studies. This study not only examines the regime's engagement with history but also investigates how Donghak and Cheondogyo, a religion that succeeded Donghak, and the ir historical roots were employed across various political contexts to reveal these religions' interaction with the regime. The Park Chung-hee regime leveraged the historical elements of Donghak and Cheondogyo, encompassing "modernization," "self-determinism," and "independence movements," to: 1) legitimize the May 16th Coup, 2) mitigate opposition to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and 3) bolster the Yushin regime. To achieve this, the regime positioned itself as the successor of the Donghak Revolution, monopolizing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o reassess the revolution, rewrite history, and implement student education and sanctification initiatives. As Cheondogyo's influence waned, it actively collaborated with the regime. Cheondogyo promptly supported the coup, elected Choi Deok-sin, closely affiliated with Park, as their leader, aligned their doctrines with the regime's ideology, and organized vanguard structures to comply with the regime's demands, all while seeking the survival of Cheondogyo.